

#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7
2. 2022년 활동원칙 .....	8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	9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	13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20개 중 10개 개선) .....	15
3. 지난안건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	22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	23
5.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	24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안건1.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	27
안건2. 학대 및 성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개정 요청 .....	31
안건3.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	34
안건4.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	38
안건5.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	42
안건6.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 .....	46
안건7.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	50
안건8.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57
안건9.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	61
안건10.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	68
안건11.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 .....	73
안건12. 서울 바우처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	78
안건1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	82
안건14.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	85
안건15.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 .....	90
안건16.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	96
안건17.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	102
안건18. 대형마트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요청 .....	107
안건19.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 제공 ..	110
안건20.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가입의 문제 .....	112

## 부 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참가 단체(단체명 가나다, 장애인단체순) .....	117
---	-----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단체의 역량 구축을 위한 실무자 개인의 역량 강화 필요
  - 장애인단체는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파트너이자 정책 제언자, 감시자 역할을 수행<sup>1)</sup>한다. 이를 위해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1993-2002)에서는 복지정책 시행의 파트너로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현대사회의 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성원을 중요시하며,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장애인단체의 역량과 경쟁력 역시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와 사회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의 제도개선 경험을 통한 교육 및 성장 기회 제공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문제 상황을 공론화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으나, 소수 직원이 여러 직무를 담당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정책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활동은 일부 단체에서만 수행하여 고른 경험이 부족한 실정임
- 유형별·직능별 장애인단체 연대를 통한 다차원적 복지욕구 해소 필요
  - 장애인 수와 욕구의 다양성 증대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을 대변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추세임. 이를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함
  - 장애인단체 간 연대 및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1) 김미리(2000),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2022년 활동원칙

- 일상 내 민원 사례 중심으로 제도 개선활동 진행
  - 장애인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 및 현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비합리적인 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집중 논의
  - 장애계가 동반 협력하여 개선해야 할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 홈페이지 및 SNS 내 별도 민원 창구 마련해 당사자 민원 접수 접근성 확대
- 실효성 높은 대안제시를 위한 회의 운영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는 실질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문성·지속성을 감안, 장애계 단체 실무총책임자의 회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부득이 회의 참석 어려운 경우, 회의 결과 및 논의점에 대해 공유하여 지속적으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풍부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위원들 대상으로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단체 간 협력에 기반해 강력한 문제해결 촉구
  - 안건 이슈화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 및 과정을 매 회의마다 공유
  - 단기 해결 가능한 안건과 장기 해결 가능한 안건을 구분하여 장애계의 참여 단체 간 협력 아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문제 해결책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신속한 반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시
  - 제도개선솔루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개별 단체에서도 건의하도록 유도해 제도개선을 촉구
- 안건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인 논의
  - 안건의 중대성에 따라 안건의 건의처 또는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논의 진행
  - 간담회 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건 진행 과정 공유



###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 장애인 권익옹호 및 정책개발·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 해결경험을 가진 장애인단체
- 장애인 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가 가능한 장애계 연합단체 및 유형별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

단체명		위원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2	한국농아인협회	이소현 실장
3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사무총장
5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
6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7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박정숙 부장
8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임선정 수석
10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권정희 사무국장
11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
12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13	한국장애인연맹	김영욱 사무처장
1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사무총장
1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이사
16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

※ 단체명 가나다, 장애인단체 순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 1. 활동경과

개요	논의 내용	건의처
<b>1차</b> 일자: 2. 23.(수) 장소: 한국장총 대회의실, 온라인 줌(ZOOM)	(안건2022-1) TOEIC 시험 의사진단서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안건2022-2) 학대 및 성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개정 요청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b>2차</b> 일자: 3. 23.(수) 장소: 이룸센터 소교육실	(안건2022-3)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안건2022-4)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b>3차</b> 일자: 4. 27.(수) 장소: 이룸센터 소교육실	(안건2022-5)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안건2022-6)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b>4차</b> 일자: 5. 18.(수) 장소: 이룸센터 소교육실	(안건2022-7)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 장애인 관련 과
<b>5차</b> 일자: 6. 15.(수) 장소: 이룸센터 소교육실	(안건2022-8)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안건2022-9)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강화 요청	- 17개 시·도청 장애인 관련 과
<b>6차</b> 일자: 7. 20.(수) 장소: 온라인 줌(ZOOM)	(안건2022-10)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안건2022-11)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안건2022-12) 서울 바우처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b>7차</b> 일자: 9. 21.(수) 장소: 이룸센터 대회의실	(안건2022-1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안건2022-14)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국내 각 항공사 (대한, 아시아나, 제주, 진에어, 티웨이, 플라이강원, 에어서울, 에어부산)

개요	논의 내용	건의처
<b>8차</b> 일자: 10. 19.(수) 장소: 이룸센터 회의실1	(안건2022-15)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 제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실
	(안건2022-16)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 서울교통공사
<b>9차</b> 일자: 11. 16.(수) 장소: 이룸센터 회의실1	(안건2022-17)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 한국공항공사 - 국내 각 항공사 (대한, 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 플라이강원, 에어서울, 에어부산)
	(안건2022-18) 대형마트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요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b>간담회</b> 일자: 3. 23.(수) 장소: 이룸센터 소교육실	보험 제도 관련 금융개선 간담회	- 금융감독원 금융현장소통반
	(안건2022-19)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 제공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
	(안건2022-20)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가입의 문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b>간담회</b> 일자: 12. 14.(수) 장소: 온라인 줌(ZOOM)	(안건2022-14)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 국내 각 항공사(10곳)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업체

##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20개 중 10개 개선)

번호	2022-01
건의 내용	TOEIC 시험 의사진단서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결과	개선
진행 내용	- 한국토익위원회는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제출 면제기간이 1년이었던 것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10월 15일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회신함. 장애인증명서 외 복지카드의 신분증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복지카드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우며, 관련 민원이 거의 없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번호	2022-02
건의 내용	학대 및 성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개정 요청
결과	일부반영(개선)
진행 내용	- 올해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22년 11월 기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임

번호	2022-03
건의 내용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결과	개선
진행 내용	- 서울교통공사는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22년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답변함.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원 모양의 여닫이형)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며, 교체 시 개방시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비교적 이상적인 플랩 없는 개집표기는 부정승차 여지가 존재해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함

번호	2022-04
건의 내용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는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다고 답변함</li> <li>-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는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렵다고 이야기 하며,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추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함</li> <li>-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는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이 이미 시행 중이며,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도 기시행 중이라고 회신함</li> </ul>

번호	2022-05
건의 내용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결과	개선
진행 내용	- 장애인당사자의 교부 수요, 소변수집장치의 기능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후 '22년 하반기부터 완화된 종합조사 기준 반영한다고 답변함

번호	2022-06
건의 내용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옴. 현재 담당 주무관이 다른 부처로 파견나가있는 상황이며, 12월 말~내년 1월쯤 돌아올 예정이라고 답변함.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이 있으나, 답변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함



번호	2022-07
건의 내용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및 제36조 제8호에 따라 사업 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의로 접수·선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함

번호	2022-08
건의 내용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결과	일부반영(개선)
진행 내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는 현재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한 쪽 면에만 설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추후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쪽면에 픽토그램을 설치해 시인성 강화 예정이라고 답변함 - 서울교통공사 건축처에서는 안내사인 설치는 서울시의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치 중이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지양되고 있다고 밝힘. 일부 환승역에 환승안내를 위한 바닥 안내사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돼 확대 시행은 미고려 중이라고 답변함

번호	2022-09
건의 내용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결과	반영예정(개선)
진행 내용	- 각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도 있었으며(서울, 부산, 충남), 예산이나 수요, 효과성 등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답변을 보내기도 함(경기, 대전, 대구, 울산, 세종, 전남, 전북). 한편 광주에서는 필요성을 체감해 타부서와 연계 추진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며, 제주도 제주시는 연도별 단계적 추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함

번호	2022-10
건의 내용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장애인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등에 필요한 자금(최대 1,500만 원)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자립자금사업, 고용노동부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매년 말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 현황, 타 사업 중복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 추가 선정 중이라고 함. 각 시·군·구에서 교부사업 지정 품목 외 품목은 잔액 발생할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교부 가능하다고 답변함

번호	2022-11
건의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
결과	일부반영(개선)
진행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운영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 업체 계약하여 이용자, 활동지원사 양 쪽으로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다고 함. 건의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연구 용역 업체에 전달했다고 함.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장총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번호	2022-12
건의 내용	서울 바우처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최근 바우처택시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 연결이 이전보다 원활히 되지 못하고 어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달함. 전용 어플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답변함. 다만, 서울시에서도 바우처택시 전용 어플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회신함. 이후 장애인바우처택시 업무가 택시정책과로 이관됨. 택시정책과에서는 ‘23년도 장애인바우처택시 예산은 장애인자립기반과가 편성했으며, 어플 기능 개선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함. 현재 연계 업체(2곳) 중 1곳만 어플이 있으며, 이는 업체 자체의 문제로 서울시가 관할할 수 없다고 답변함.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콜택시 어플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번호	2022-13
건의 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변경과 같은 제도 개선은 타 사업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될 예정으로, 건의된 바는 향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검토 시 참고하겠다고 답변함

번호	2022-14
건의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결과	반영예정(개선)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항공사 중 5개 항공사(아시아나, 제주, 플라이강원, 진에어, 에어부산)에서 회신. 플라이강원과 제주항공은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하고, 그 외 항공사(아시아나, 진에어)는 관계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에어부산은 유선상으로 건의서를 토대로 내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li> <li>-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는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등)를 요청함.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 함. 12월에 항공사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li> <li>- 12월 간담회 후,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 모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수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함. 다만 안전성에 대한 확보, 인공와우 이용자 이해 및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한국장충은 안정성 및 인공와우 이용자에게 대한 이해를 알리고 국토부가 지침을 권고하여 항공사들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함</li> </ul>

번호	2022-15
건의 내용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 제외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장애인인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수급연령과 관계없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가입기간을 20년으로 간주 산정하여 노령연금보다 장애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변함. 또한,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축돼 지급받는 노령연금액 감소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함. 노령연금 평균 수령기간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2017~2022.6월 기준 장애인 177개월, 비장애인 163개월), 외국에서도 장애유형별 기대여명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 함. 전반적으로 비장애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li> </ul>

번호	2022-16
건의 내용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가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 소별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 형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함. 현재 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집표기는 각 역사 환경을 고려해 승차 또는 하차 모드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여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함</li> <li>-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에서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 추가와 관련해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 시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회신함</li> </ul>

번호	2022-17
건의 내용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결과	반영예정(개선)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모든 유형이 사용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가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제주항공에 대해 이용가능하도록 운영 중임. 내년 초 제주항공이 취항 중인 국내선에 확대 예정이며, 항공사 연계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 답변함. 현재 대한항공과 연계 테스트 중이라 회신함</li> <li>-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운영 중인 키오스크의 새로운 버전을 2024년까지 개발해 도입 예정이라고 함. 교통약자 사용 기능 또한 함께 추진해 2024년부터 사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함</li> <li>- 대한항공은 건의 전부터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 중이며, 국내 공항 설치 셀프체크인 기계로 구현될 수 있는지 점검 중이라 회신</li> </ul>

번호	2022-18
건의 내용	대형마트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요청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회신 대기 중임</li> </ul>

번호	2022-19
건의 내용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 제공
결과	반영예정(개선)
진행 내용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은 각 협회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건의 사항의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했다고 회신함

번호	2022-20
건의 내용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가입의 문제
결과	진행중
진행 내용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계약인수지침은 회사가 자체 상황에 맞게 장기기증 공여자의 위험 증감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 개선 권고는 어렵다고 답변함. 장기기증 공여자의 위험 증감 관련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향후 제도개선 검토 예정이라 회신함

※ 개선 10건(반영, 예정 포함), 진행중 10건

### 3. 지난안전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번호	2016-12
건의 내용	신장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기준 조정
결과	개선(반영)
진행 내용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신장장애 2급(투석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 등급 재판정 1회 적용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거나 5급(이식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 등급재판정에서 제외 요청. '22년부터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 동안 장애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번호	2019-12
건의 내용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확대 요청
결과	개선(반영)
진행 내용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투석당일 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항목 확대 요청.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류 시술하는 항목 추가

번호	2020-19
건의 내용	감면행복단말기 이용 시 신청 및 변경과정 개선 요청
결과	개선
진행 내용	-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하이패스팀)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정보 변경가능하도록 요청. 등록 과정이 번거로운 감면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와 휴대폰 위치 인증만으로 하이패스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22년 11월 본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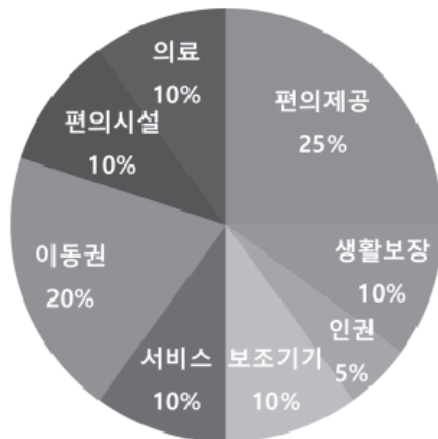
번호	2021-03
건의 내용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 대책 마련 요청
결과	반영예정
진행 내용	-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 안전사고율이 높거나 간격과 단차가 가장 큰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안전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시범 설치사업을 예정하고 있음

번호	2021-20
건의 내용	국민투표법 장애인 비하 명칭 변경 요청
결과	개선(반영)
진행 내용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국민투표법 외 차별용어가 쓰인 법률을 조사 및 개정 계획 수립 요청 ‘22년 4월 차별적 용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의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정비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내부 메일로 안내함.

####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 2022년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건의 분야는 편의제공 25%, 이동권 20%, 편의시설·서비스·생활보장·보조기기·의료 각 10%, 인권 5% 순으로 나타남
- 올해는 편의제공 및 이동권에 대한 건의가 다수였고, 편의시설, 서비스, 생활보장, 보조기기, 의료에 대한 건의가 뒤를 이음. 인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의가 적었음. 예년과 비슷하게 편의에 대한 개선욕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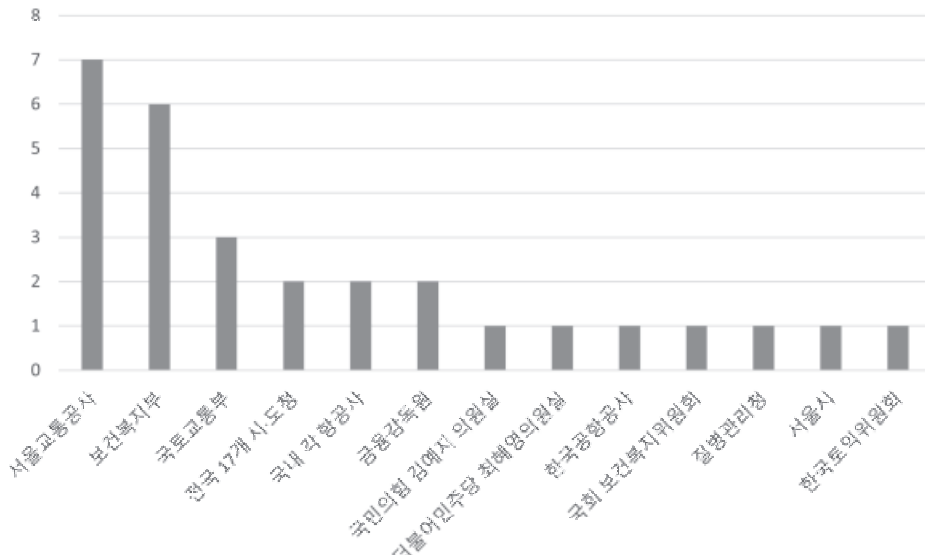
2022 제도개선 건의분야



## 5.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 2022년도 제도개선 건의처로는 이례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부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3건, 전국 17개 시·도청, 국내 각 항공사, 금융감독원은 각 2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한국공항공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청·서울시·한국토익위원회 각 1건으로 총 27곳의 건의처에 개선 요청을 청하였고 관련 내용은 세계로컬타임즈, 전국매일신문, 서울신문, 에이블뉴스, 웰페어뉴스, 소셜포커스 등 각 언론사를 통해 70차례 이상 보도되었음
- 올해 이슈가 많았던 서울교통공사 대상 건의가 가장 많았고, 장애계 현안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부 대상 건의가 그 뒤를 이었음. 이 외 이동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기업 및 기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국회 등 입법 기관과도 소통하였으며, 금융감독원, 한국토익위원회, 질병관리청, 전국 17개 시·도청 등 각 분야별 전반적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갔음

2022 제도개선 건의처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안건 2022-01

##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 □ 제안배경

-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TOEIC(이하 '토익')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연하게 쓰임
  - 한국토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토익 응시의 목적이 '취업'인 경우가 제일 높은 29%, '졸업'이 24%, '승진'이 11%로 나타남
  - 공공기관, 사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익을 어학자격 요건으로 참고하거나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토익 시험 응시 시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부담이 커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는 증가해왔으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에 응시한 장애인이 지난 2013년에 448명에서 2017년 10월에 723명으로 꾸준하게 늘었음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토익 응시자 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정 장애인은 토익 응시 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뿐만 아니라 의사진단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함
  -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정도가, 의사진단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장애를 입었는지가 나타남
  -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알맞은 편의를 지원함

- 토익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계속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의사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클뿐더러 사실상 최초 1회로 충분함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더불어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비용이 발생함.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어려울뿐더러 비장애인과 달리 매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
- 세법상 ‘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장애가 일정 기간 이상 고착화되어 호전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록이 되므로 장애가 영구적이라 할 수 있음
- 의사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여도 편의제공 시 충분히 지속적으로 참고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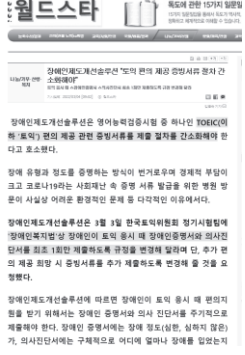

#### □ 건의방향 (건의처: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여도 지속적으로 편의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험관리규정 개정 요청
- 장애 심화 등 추가적으로 편의제공 지원 받고 싶은 경우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일 규정 개정 요청

#### □ 관련경과

- 3월, 건의처에 ‘TOEIC 시험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3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영구와 비영구 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의를 함
- 4월, 증빙자료 발급기간이 1년이었던 것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함. 이에, 대학생 기간(4년)만큼은 1회 제출로 보장되도록 요청함
- 5월, 장애인증명서 외에 복지카드도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
- 7월, 복지카드는 진위여부 파악이 어려우며, 관련 민원이 거의 없어서 인정하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소셜포커스	3. 0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토익 편의 제공 증빙서류 절차 ...	
웰페어뉴스	3. 04.	토익 시험 볼 때마다 제출하는 장애증명, '개선 요청'	
월드스타	3. 04.	토익, 매년 응시할 때마다 '장애 증명' 요구?... "개선해야!" -	
세계로컬타임즈	3. 07.	"장애인으로 지낸지 수년째...토익은 매년 장애 증명" -	

안건 2022-02

## 학대 및 성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개정 요청

### □ 제안배경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에 따라 2002년부터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
  -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음
- 표준사업장은 여전히 학대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문제가 제기됨
  - 지난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및 학대 예방 조치 마련 등을 요청한 바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학대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재취업이 가능하여 여전히 학대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

### □ 현황 및 문제점

-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장애인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어야 표준사업장이 될 수 있음
  - 표준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수는 2017년 6,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1,115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없어 학대가능성이 열려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아동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등에서도 취업이 어려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 중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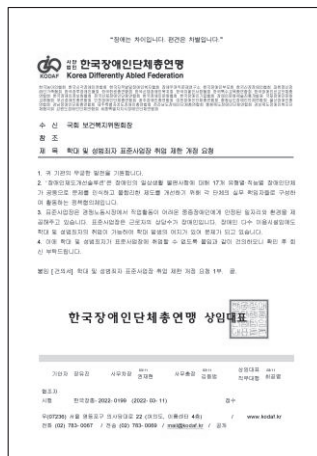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다수 고용된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음

□ 건의방향 (건의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내 취업제한 기관 개정 요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포함 요청

□ 관련경과

- 3월, 건의처에 ‘장애인복지법 내 취업제한 기관 개정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회신해옴
- 4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함(2022.11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상태임)



학대 및 성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개정 요청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장애인신문	3. 1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학대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해야”	
에이블뉴스	3. 14.	학대범죄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필요	
더인디고	3. 14.	성범죄자, PC방 취업 못 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가능... 법 개정 시급	
파이낸셜뉴스	5. 15.	모욕주고 학대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표준사업장'	

안건 2022-03

##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 □ 제안배경

-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적시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임
  -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석, 교통약자용 게이트, 승강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옴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평소 지하철 개찰구로 입·퇴장 시 개방시간이 너무 짧아 부딪히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며 혼자 외출하는 장애인이 많음
  -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78.6%가, 지체장애인은 87.4%가 혼자서 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여 지하철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 중 7.8%가, 지체장애인은 7.2%만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음
  - 편의시설 부족(12.1%)이나 전용 교통수단의 부족(17.4%)보다 기존 교통수단의 이용 불편(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이 교통수단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임
  - 지하철 역시 동일한 이유로 이용이 저조함
- 지하철 초입인 개찰구를 들어가는 데에도 긴 시간이 소요됨
  -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은 일반형과 교통약자형(스피드게이트, 플랩형) 모두 10초로 통일되어있음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교통카드 태그과 조이스틱 조작 등 일련의 과정으로 10초 이상 소요됨
- 개찰구가 빨리 닫혀서 문에 부딪히거나 조이스틱이 망가지는 등 불편함이 발생

〈사례〉

교통카드 꺼내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들어가면 시간이 다 돼서 문이 닫혀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온몸을 부딪히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

조이스틱과 카드 태그 위치 둘 다 오른쪽이어서 태그하면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전동휠체어 조이스틱도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시간이 초과돼 문이 닫히면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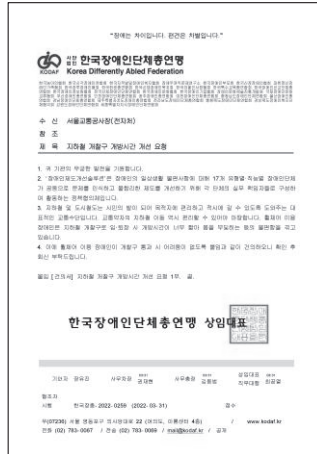
□ **건의방향 (건의처: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몸을 부딪히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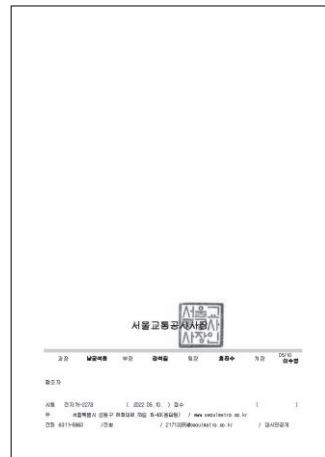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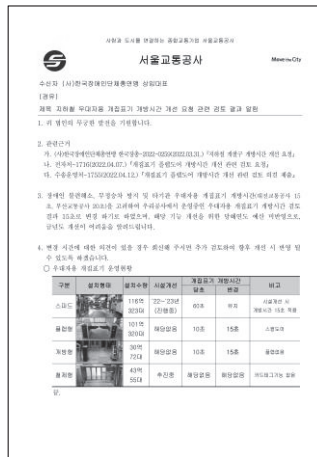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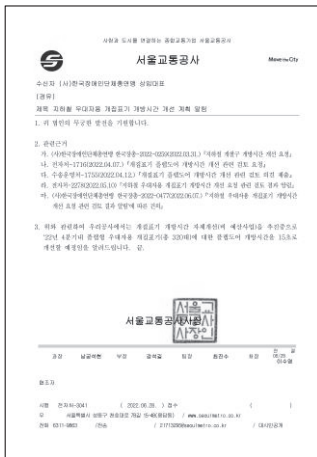
□ **관련경과**

- 3월, 건의처에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4월, 개찰구 개방시간이 몇 초면 적당한지, 개찰구에 가다가 부딪힌 경험이 있는지를 답사차원에서 확인 요청함. 이에 경험이 있는 당사자를 소개했으나, 인사이동 및 내부 사정으로 실사는 하지 않음
- 4월,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으며, 부정승차 여지가 존재해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함.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임.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함

○ 5월, 부산, 대전의 경우 각 15, 20초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2022년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을 늘리겠다고 답변 공문 회신 받음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개선 요청



서울교통공사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장애인신문	4. 1.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부족'	
에이블뉴스	4. 1.	지하철 개찰구 통과 10초? “장애인 불편해”	
더인디고	4.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겐 ‘위험한 10초’...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조정해야	

안건 2022-04

##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 □ 제안배경

-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적시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임
  - 버스나 택시와 달리 교통체증에 비교적 자유로워 정시성 및 신속성이 높음
- 전동차승무원업무예규상 정차역 도착할 즈음 역 안내, 환승안내 등을 하도록 함
  - 지하철 열차별, 열차 내 칸별 소음 및 스피커 상태에 따라 안내방송 소리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이 제 때 내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안내방송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서울교통공사의 보도자료(2021)에 따르면, 전동차 냉·난방, 열차내 질서 저해 등 지하철 이용 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안내방송 관련 민원은 다른 민원 감소폭(2,500~15,800건)에 비해 소폭 감소(17건)함. 문제가 지속적이며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함
- 소음이 심하거나 스피커 상태 등으로 안내방송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권고 주행소음 기준 최대 92dB(데시벨)로 규정함
  - 소음이 심하면 90~100dB 이상으로 가기도 하며, 이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언급하는 난청 증상이 나타나는 구간임
  - 스피커 상태가 노후하거나 스피커 음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기도 함

- 안내방송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목적지 하차가 어려워짐
  - 안내방송이 없으면, 정차하는 찰나의 순간에 주변 정보를 통해 역 정보를 알아내야 하지만 시간은 짧고 그마저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음
  - 시각장애,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앞은키가 작아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에 집중해야하며,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타인에게 역을 확인하기 어려움
  - 비장애인도 겪고 있는 문제이며 안내방송에 의지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

〈사례〉

지하철 안내방송이 너무 작아서 가려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의 열차에 그 사실을 모른 채 40분을 타고 간 적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는데 80분 가량 다시 지하철을 타야하는 상황이었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다.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메트로나 코레일에 5번 넘게 전화해 안내방송 소리를 키워달라 하였으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노약자석 어르신들도,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정차한 역이 어딘지 알아내느라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결국 소리크기는 그대로인 상태로 들리지 않았다.

- 시각장애인 A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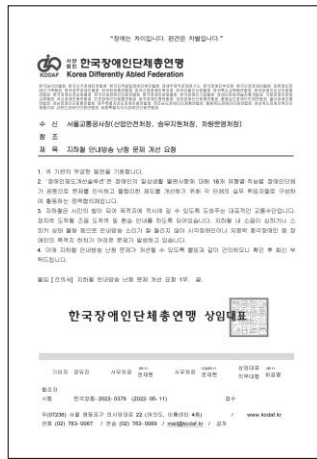
□ **건의방향 (건의처: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승무지원처, 차량운영처)**

-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 구간(92dB 이상) 및 시간대 전수 조사(산업안전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승무지원처)
  - 육성방송인 경우, 발음 정확도 및 목소리 크기에 대한 기관사 및 승무원 교육(승무지원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적 점검 및 수리 규정 마련(차량운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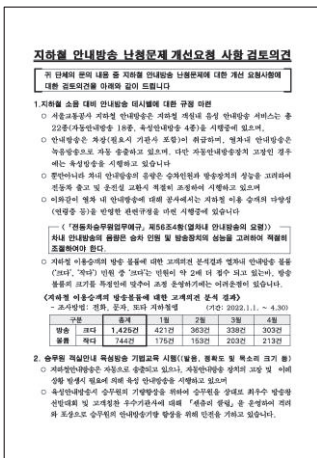
□ **관련경과**

- 5월, 각 건의처에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5월,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는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가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을 넘기는 구간이 없었다고 답변함. 서울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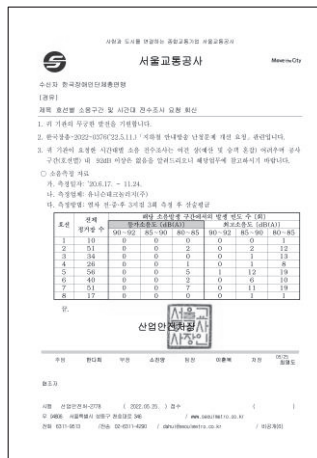
승무지원처는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다고 이야기하며,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은 어렵다고 회신함. 안내방송 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함. 서울교통공사 차량 운영처는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시행 중이며,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 불량, 이상 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고 있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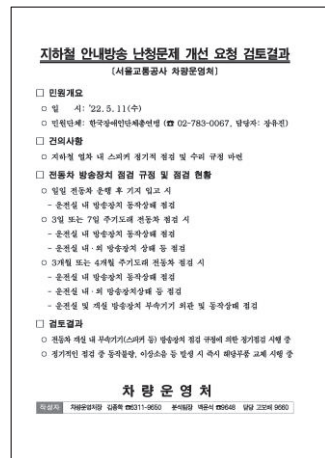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승무지원처 회신






산업안전처 회신



차량운영처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5. 12.	“지하철 안내방송 안들려요” 장애인들 발 동동	 <p>장애인뉴스 Ablenews          장애인뉴스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뉴스입니다.          장애인뉴스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뉴스입니다.          장애인뉴스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뉴스입니다.          장애인뉴스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뉴스입니다.</p>
장애인신문	5. 12.	지하철 안내방송, 장애인 위한 데시벨 규정 '필요'	 <p>장애인신문          장애인신문은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신문입니다.          장애인신문은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신문입니다.          장애인신문은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신문입니다.          장애인신문은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장애인신문입니다.</p>
더인디고	5. 12.	“지하철 탈 때마다 긴장돼요”… 안 들리는 안내방송에 도착역 지나치기 일쑤	 <p>The Indigo          더인디고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더인디고입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더인디고입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더인디고입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더인디고입니다.</p>

안건 2022-05

##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 □ 제안배경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보조기기를 필요한 당사자에게 교부 및 대여하고 있음
  - 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음
- 소변수집장치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음
  - 소변수집장치는 속옷 형태로 된 옷을 입고,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하여 배뇨박스에 모이는 장치임
  - 단순히 ‘소변조절’이라는 생리학적 기준만으로 교부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 현황 및 문제점

- 배뇨 관련 지원에 대한 뇌병변장애인의 욕구가 상당하나 비용 부담이 있음
  -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 중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로 과반수 이상, 배뇨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35%였음
  - 신변처리 관련 보조기기인 ‘이동변기’에 대한 필요는 전체 장애인 중 약 23만 명 정도가 느낀 것으로 보아 편리한 신변처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
  -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절반 가까이 ‘비용(42.3%)’을 꼽음. 소변수집장치는 단가가 약 120만 원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함
- 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소변수집장치 교부 기준이 극단적임
  - 보조기기 교부 적격성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후 보조기기와 관련

한 특정 항목 평가점수를 활용해 결정됨

- 소변수집장치는 ‘배뇨(성인)’, ‘화장실 이용하기(아동)’의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24점)’한 경우만 지원됨

○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음

- 단순 소변조절능력 유무의 여부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활동지원이 24시간이 아닌 경우나 밤에 배뇨감이 드는 경우 등 일상생활지원이 어려운 편마비, 독거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매우 필요함
- 현재 신변처리에 사용되는 기저귀는 오래 착용 시 욕창이 발생할 수 있고, 활동지원사 등 타인이 성기를 보거나 만지면서 몇 번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 소변수집장치는 애로사항 및 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음

□ **건의방향 (건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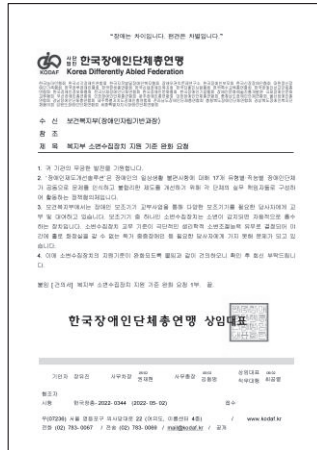
○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 내 ‘배뇨’, ‘화장실 이용하기’항목에의 ‘상당한 지원필요(8점)’까지 포함 또는 특이사항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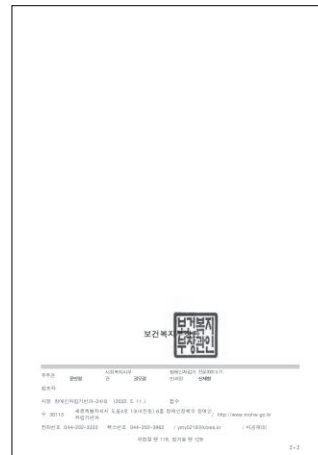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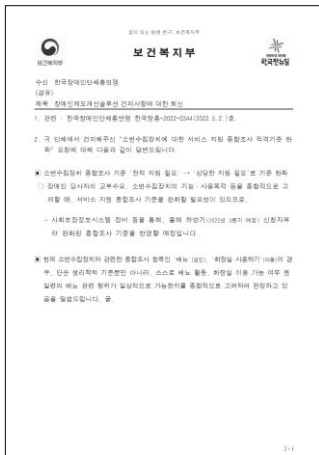
□ **관련경과**

- 5월, 건의처에 ‘복지부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5월, 장애인 당사자의 교부 수요, 소변수집장치의 기능 및 사용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하반기(3분기)부터 완화된 종합조사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 7월,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진행 중에 있으며, 개편되는 대로 완화된 기준으로 종합조사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복지부 소년수집장치 지원 기준 완화 요청



보건복지부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웰페어뉴스	5. 4.	보조기기 '소변수집장치', 교부 기준 탓에 지원 못 받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5. 4.	장애인 보조기기 '소변수집장치' 문턱 높다	
더인디고	5. 4.	장충, '소변수집장치'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에 요청	
금강일보	5. 11.	편마비인데... 소변수집장치 지원 못 받은 이유	

안건 2022-06

##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

### □ 제안배경

-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당사자나, 가족, 그 외 제3자가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음
-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꼭 하도록 되어 있음
  - 지체 및 뇌병변 장애나 시각장애 등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강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록은 다양한 경우에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음
  - 보험비 청구를 위한 제출, 원활하고 효과적 치료를 위한 병원 간 의료기록 공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의료기록이 필요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이 요구됨
  - 본인이 아닌 가족, 대리인 등 타인이 요청할 경우 당사자의 자필이 서명된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함
  - 당사자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으나, 관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존재하기도 함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도 명시했으나,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포괄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자필서명이 제외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음
  - 사망이나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 질환 등 당사자가 동의가

불가한 상황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케 함.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병원들은 임시적으로 위 상황에 장애인을 포함시킴

- 자필서명 불가한 장애인은 만 14세 미만이 아닌 경우도 있고, 동의할 능력은 있으나 대체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일부 관행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대신 서명하는 상황도 발생함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필서명 외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 의료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전화 동의, 인터넷 동의, 전자우편(이메일) 동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에서는 단순히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받고 있음

〈사례〉

대구 지역 닳듯돌장애인지원센터 이민호 권익옹호 팀장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7일,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 대구 모 대학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요구했고, A씨는 양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 측이 흥내라도 내라고 강제하자 A씨는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인권위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차별 발생 꼭 1년만인 지난 7일, 해당 병원은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인권위를 통해 알렸다.

사례 출처: [장차법 시행 14년]② ‘자필서명’에 달린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새 정부는 열개!(더인디고/ 22.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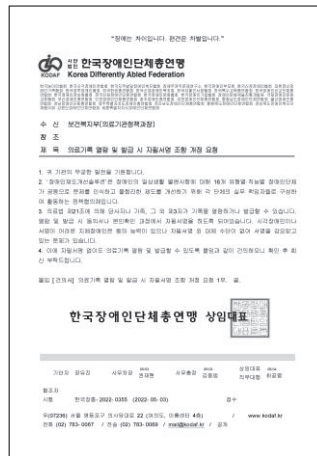
□ **건의방향 (건의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4항에서 본인 확인 시 자필서명 없이도 기록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서 자필서명 동의서 외 대체수단(전화, 메일, 인터넷 등) 활용, 장애인등록증 같음 포함

□ **관련경과**

- 5월, 건의처에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6월, 기존 담당자가 바뀌어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함
- 10월,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함. 현재 담당 주무관이 파견 나가있는 상황이며 12월 말~내년 1월쯤 돌아올 예정이라고 함.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이 있으나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고 회신함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 조항 개정 요청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5. 6.	자필불가 장애인, 의료기록 열람 '사각지대'	 <p>블렌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p>블렌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p>자필불가 장애인, 의료기록 열람 '사각지대'</p> <p>블렌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웰페어뉴스	5. 6.	“서명 못하면 의료기록 못 봐” 장애인 ‘황당’	 <p>웰페어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p>“서명 못하면 의료기록 못 봐” 장애인 ‘황당’</p> <p>블렌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쿠키뉴스	5. 6.	“글씨 못 쓰는 장애인은 의료기록 못 보나요”	 <p>쿠키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p>“글씨 못 쓰는 장애인은 의료기록 못 보나요”</p> <p>블렌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더인디고	5. 6.	글씨 쓰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필서명’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해야!	 <p>더인디고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p>글씨 쓰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필서명’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해야!</p> <p>블렌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뉴스포스트	5. 13.	[팩트체크] 자필 서명 못하는 중증 장애인, 의료기록 열람 못한다?	 <p>뉴스포스트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p>[팩트체크] 자필 서명 못하는 중증 장애인, 의료기록 열람 못한다?</p> <p>블렌뉴스는 장애인, 노인, 고령, 저출생, 양극, 전문직, 단대, 건강, 기타특종</p>

안건 2022-07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 □ 제안배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10% 내의 범위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게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여 공급 가능함
- 관계기관은 주로 지역별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주민센터로 들어온 신청들 중 입주자를 추천함
  - 당사자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은 신청이 불편함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주거보장에 대한 욕구는 상당함
  -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가 ‘자가가 아닌 경우’는 41.8%로 상당한 수를 차지함.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른 자가점유\*가 아닌 비율이 43.2%인 것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임
  - \* 자가점유율: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
  - 동일 조사에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7.2%가 소득과 고용보장 다음으로 주거보장을 1순위로 꼽음
  - 2020년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의 인기 지구 경쟁률은 무려 170:1이나 될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인기 지구 예시(2020년)〉

공동주택 명	서울시추천명단공고	배정 세대	신청자 수
마곡지구 9단지	2/26(수)	7	681
흑석리버파크자이	5/15(금)	1	170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 14단지	6/10(수)	4	190
DMC파인시티자이	8/11(화)	8	140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11/2(월)	4	223
하남 감일 푸르지오	11/3(화)	1	150
위례지구 A1-5, 12BL	11/26(목)	15	903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12/21(월)	9	496

- 특별공급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함
  - 특별공급 신청 과정은 크게 <신청 공고 안내 → 주민센터 신청 → 기관 추천 명단 확정 → 인터넷 청약 접수>로 나뉨
  - 특별공급 신청 시 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등 직접 작성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서류들을 방문해서 제출해야함
- 특별공급 신청이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어 불편함이 제기됨
  - 당사자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증빙서류 준비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방문접수만 허용되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은 서류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 신체적·시간적 부담 등을 느껴 방문 접수가 불편함
  - 신청한 경험이 쌓이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능숙해지기 마련이며, 미비한 경우에 방문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일처리를 할 수 있음
  - 인터넷이나 우편 및 팩스를 활용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각종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 받고 있음)

□ 건의방향 (건의처: 17개 시·도청)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 이메일, 인터넷, 우편 및 팩스 등을 활용한 창구 추가 요청

□ 관련경과

- 5월, 각 건의처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6월까지 17개 시·도청 중 15개 시·도청(부산, 제주 제외)에서 답변음. 불법 명의 도용 우려로 인한 철저한 본인확인, 생애 1회 당첨 제한인 재산, 구비서류 현장 발급 용이성 등의 이유로 모든 지자체에서 추가 창구 개설이 어렵다고 답변함.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건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이후 6월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건의한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및 제36조 제8호에 따라 사업 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의로 접수·선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함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광주광역시

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명)  
 제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 복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2-0438(2021.5.26.13차) 광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하여 불합격 되어 복신합니다.

불합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 접수서 1부, 문.

광주광역시

주소	광주광역시 광안로 100	전화	02-222-1111
팩스	02-222-1111	홈페이지	www.gwangju.go.kr

## 광주광역시 회신

부산광역시

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명)  
 제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요청에 대한 복신

1.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중-2022-0438(20209.26)로써 관할합니다.

2. 각 영역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사항 제출을 거듭하여 불합격하시니 차등에 따라는 장애인정중을 위하여 이의신청 하시므로, 소 신청을 복신하여 재심의를 요청 하시므로 하여 이의와 같은 사유로 장구 확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재 -

가.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애인에 추가 인정을 위해 '주요공급에 관한 규정', '해 지역별 고용촉진 지원정책'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나. 부산시는 육로교통의 불편한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애인에 대한 인정을 위하여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애인정중을 위하여 복신하시니 신청하시므로 복신, 신청서의 제출 관련 사항 등 유익 및 잔의 여부, 지역 조건 등을 설명서를 통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장애인정중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해 '부산광역시 장애인정중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장애인정중 기준이 초과된 사유, 분할, 누계, 누계 정정 사항 등을 설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통해 장구 확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또한, 기준초과신청이 원인이 되는 장애 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복제 서비스의 사법 (장애인정중서비스 기준 초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따라 복제하여 인가 되는 경우부터 분할 신청을 통해 장애인정중 신청 처리의 필요성이 있을, 문.

부산광역시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읍 연제로 100	전화	051-222-1111
팩스	051-222-1111	홈페이지	www.busan.go.kr

## 부산광역시 회신

대구광역시

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명)  
 제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복신

1. 한국정중-2022-0438(2022.5.26.13차) 광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하여 불합격 되어 복신합니다.

불합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 접수서 1부, 문.

대구광역시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100	전화	053-222-1111
팩스	053-222-1111	홈페이지	www.daegu.go.kr

## 대구광역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명)  
 제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 복신

1. 한국정중-2022-0438(2022.05.26)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한 복신합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정책 '장애인특별채용, 제2조 및 '주요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애인에 대한 인정을 위하여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애인정중을 위하여 복신하시니 신청하시므로 복신, 신청서의 제출 관련 사항 등 유익 및 잔의 여부, 지역 조건 등을 설명서를 통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장애인정중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해 '서울특별시 장애인정중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장애인정중 기준이 초과된 사유, 분할, 누계, 누계 정정 사항 등을 설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통해 장구 확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또한, 기준초과신청이 원인이 되는 장애 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복제 서비스의 사법 (장애인정중서비스 기준 초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따라 복제하여 인가 되는 경우부터 분할 신청을 통해 장애인정중 신청 처리의 필요성이 있을, 문.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222-1111
팩스	02-222-1111	홈페이지	www.seoul.go.kr

## 서울특별시 회신

울산광역시

수신 장애인단체총연맹 (광명)  
 제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한 복신

1.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중-2022-0438(2022.05.26.13차) 광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하여 불합격 되어 복신합니다.

2. '주요공급에 관한 규정' 및 '해 지역별 고용촉진 지원정책'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장애인정중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애인에 대한 인정을 위하여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애인정중을 위하여 복신하시니 신청하시므로 복신, 신청서의 제출 관련 사항 등 유익 및 잔의 여부, 지역 조건 등을 설명서를 통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장애인정중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해 '울산광역시 장애인정중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장애인정중 기준이 초과된 사유, 분할, 누계, 누계 정정 사항 등을 설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통해 장구 확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또한, 기준초과신청이 원인이 되는 장애 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복제 서비스의 사법 (장애인정중서비스 기준 초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따라 복제하여 인가 되는 경우부터 분할 신청을 통해 장애인정중 신청 처리의 필요성이 있을, 문.

울산광역시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전화	052-222-1111
팩스	052-222-1111	홈페이지	www.ulsan.go.kr

## 울산광역시 회신

세종특별자치시

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명)  
 제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한 복신

1. 한국정중-2022-0438(2022.05.26)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한 복신합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정책 '장애인특별채용, 제2조 및 '주요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애인에 대한 인정을 위하여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애인정중을 위하여 복신하시니 신청하시므로 복신, 신청서의 제출 관련 사항 등 유익 및 잔의 여부, 지역 조건 등을 설명서를 통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장애인정중 장애인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한 장구 확대 요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정중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장애인정중 기준이 초과된 사유, 분할, 누계, 누계 정정 사항 등을 설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통해 장구 확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또한, 기준초과신청이 원인이 되는 장애 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복제 서비스의 사법 (장애인정중서비스 기준 초과 신청서 작성 방법)에 따라 복제하여 인가 되는 경우부터 분할 신청을 통해 장애인정중 신청 처리의 필요성이 있을, 문.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00	전화	029-222-1111
팩스	029-222-1111	홈페이지	www.sejong.go.kr

## 세종특별자치시 회신

전라남도

주요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2022-04382000) 5, 26, 28호에 관해 문의합니다.

2.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의 추가 신청을 위해 부구청에 구청장인 장재민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의 추가 신청을 위해 부구청에 구청장인 장재민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의 추가 신청을 위해 부구청에 구청장인 장재민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의 추가 신청을 위해 부구청에 구청장인 장재민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주소	전라남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주소	전라남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인천광역시

주요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2.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3.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4.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인천광역시

주소	인천광역시	전화번호	010-9999-1111
주소	인천광역시	전화번호	010-9999-1111

인천광역시

주요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2.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3.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4.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인천광역시

주소	인천광역시	전화번호	010-9999-1111
주소	인천광역시	전화번호	010-9999-1111

전라남도 회신

인천광역시 회신

전라북도

주요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2.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3.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4.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전라북도

주소	전라북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주소	전라북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충청남도

주요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2.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3.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4.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충청남도

주소	충청남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주소	충청남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충청남도

주요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2.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3.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4.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충청남도

주소	충청남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주소	충청남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전라북도 회신

충청남도 회신

충청북도

주요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2.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3.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4. 관공제 임대용 특활공급 신청 접수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충청북도

주소	충청북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주소	충청북도	전화번호	010-9999-1111

충청북도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5. 27.	장애인 특별공급 무조건 방문접수? “불편해”	
웰페어뉴스	5. 27.	방문접수만 가능한 장애인 특별공급, 개선 요청	



안건 2022-08

##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 제안배경

- 지하철은 시민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적시에 데려다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하철에는 일반 개찰구와는 달리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개찰구가 설치되어있음
  -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비장애인이 교통약자 개찰구를 많이 이용하여, 오히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기다려야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많음
  -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주된 교통·이동수단으로 ‘지하철·전철(7.8%)’이 꼽혀 버스 및 자동차 다음으로 자주 이용됨.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이용이 어려워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음
  - 서울교통공사가 조사한 월별 장애인승하차 인원을 살펴보면, 2022년 1, 2월 동안 평균 약 17,820여 명이 서울 지하철을 승·하차함
-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지하철 개찰구 사용이 어려움
  -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승하차 평균 인구(약 1,400만 명)에 비해 출근(오전 8~9시) 및 퇴근(오후 6~7시) 시간에는 2,400만 명 이상 지하철을 이용했음
  -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비장애인이 교통약자 개찰구를 이용하게 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함. 기다리다가 열차를 놓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사례〉

출퇴근 시간에 비장애인이 장애인도 통과하는 개찰구를 이용해 기다리는 경험은 매일 합니다. 심지어 넓은 개찰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원래 양방향으로 출입 가능한데, 바쁜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 방향으로만 이용됩니다. 그럼 저는 다 나올 때까지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

- 교통약자 개찰구가 취지대로 잘 이용되도록 시각 요소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고속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은 경로를 미리 안내해주기 위해 고안되었음.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통사고가 분기점에서는 22%, 나들목에서는 40%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 어린이 보호구역의 옐로우카펫은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만들어진 설치물로, 설치 후 운전자의 89.3%가 횡단보도 지날 때 ‘감속 또는 정지/확인 후 주행’한다고 답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보임
  - 지하철의 교통약자 개찰구도 시인성(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는 성질) 있는 요소를 배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최대한 장애인이 교통약자 개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 개찰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헛갈리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유도선 배치도 필요함

□ **건의방향 (건의처: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전자처)**

-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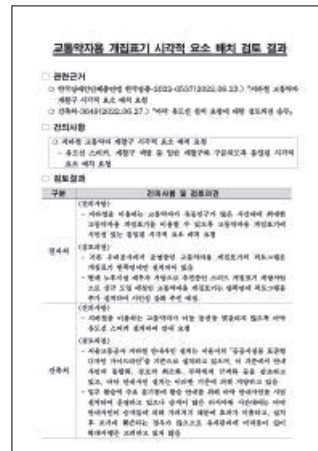
□ **관련경과**

- 6월, 각 건의처에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7월, 서울교통공사 전자처는 현재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다고, 추후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서울교통공사 건축처는 안내사인 설치를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치 중이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에 지양되고 있다고 답변함. 일부 환승역에 환승안내를 위한 바닥 안내사인을 설치해 운영 중이나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돼 확대 시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달함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서울교통공사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웰페어뉴스	6. 24.	교통약자 개찰구, 출·퇴근 시간 장애인 이용 어려워	
에이블뉴스	6. 24.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 출퇴근 이용 주객전도	
더인디고	6. 24.	'비장애인 먼저'... 지하철 '교통약자 개찰구'에서 기다리는 장애인들!	

안건 2022-09

##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 □ 제안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주차면의 2~4%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되어야함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주차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차는 줄지 않음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이 이동 시 자동차를 많이 사용함
  -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주된 교통·이동수단 1위로 ‘자가용(30.8%)’이 꼽힘
  - 동일 조사에서 과반수(60.5%)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보행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체장애는 70.1%, 뇌병변장애는 30.7%가 운전함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주차에 난항을 겪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국 920만여 면의 주차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은 약 33만 면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약 15만 건(2015)에서 60만 건(2019)으로 4배 증가했으며 과태료는 5년간 약 1,480억 원에 달함. 중복위반건수도 7배 정도 증가함

- ‘잠깐이면 괜찮다’, ‘장애인이 없다’, ‘나 하나쯤이야’ 등의 이유로 불법주차가 늘고 있고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사례〉

장 씨는 2019년 2월 2일, 용산구 소재의 유명 대형몰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누군가 버젓이 암체 주차를 해놓은 것이다.

장 씨의 아이가 몇 해 전 갑자기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하여 지체장애 1급을 판정받았다. 현재 아이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외부에 나가게 되면 휠체어에서 아이를 들어 옮겨 태워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암체 주차 차량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했다.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하다 화가 나 장애인주차위반 신고 앱으로 신고하였다.

출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맹점(에이블뉴스, 2019.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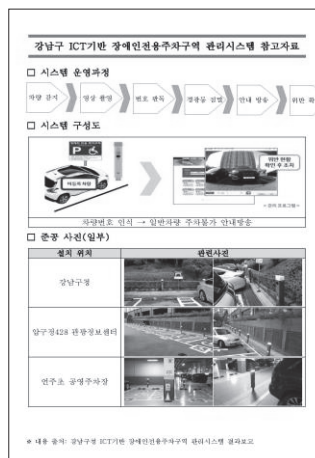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함
  -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을 시 경고음이 계속 울리며 주차를 막음
  -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해당기간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거둠
  - 이 외에도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해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를 방지 및 예방해야함

□ **건의방향 (건의처: 17개 시·도청 또는 불법주차 위반 건수 높은 지자체)**

-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강화 요청
  -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
    - : 병원,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 우선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최소 10면 이상 시스템 도입(기설치된 경우 추가 설치 요청)

□ **관련경과**

- 6월, 각 건의처에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강화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7월까지 17개 시·도청 중 12개 시·도청(강원, 경남, 경북, 인천, 충북 제외)에서 답변음. 각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서울, 부산, 충남), 예산이나 수요, 효과성 등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답변을 보내기도 함(경기, 대전, 대구, 울산, 세종, 전남, 전북). 한편 광주에서는 필요성을 체감해 타부서와 연계 추진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며, 제주도 제주시는 연도별 단계적 추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함



강남구 ICT기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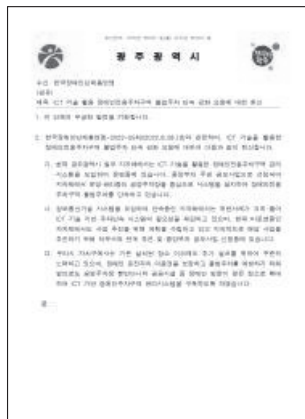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경기도 회신



광주광역시 회신



부산광역시 회신



대구광역시 회신



대전광역시 회신














제주시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6. 29.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해야”	
더인디고	6. 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해법 없나?	
장애인문화복지신문	6. 29.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 요청	
웰페어뉴스	6. 30.	증가하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강화해야”	
충남인터넷뉴스	7.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무시 늘어, 휠체어도 못 내려	

안건 2022-10

##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 □ 제안배경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교부 및 대여할 수 있음
  - 교부 가능한 품목을 명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는 호흡용 보조기기, 인지치료용 보조기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차량용 보조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차량도 명시돼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사업에서는 각각 36개 품목, 83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용 보조기구나 장애인용 특수 차량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언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차량 개조 시 용자를 해주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동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특수 및 개조 차량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빈도가 높아지면서 외출도 늘어났으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게 됨
  -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약 45%, ‘주 1~3회’ 외출하는 경우가 약 33%로, 상당수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의 이유로 자주 외출하고 있음
  - 동일 조사에서, 외출 시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상버스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도 있으나 버스 승차의

어려움, 1역사 1동선 미비,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편함. 자동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 각종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이동이 잦으나,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장애인이 탑승 및 운전 가능한 차량을 마련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됨
  - 면허가 있으나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동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경제력 부족(21.6%)’을 두 번째로 많이 꼽고 있음
  - 현재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 보조기기 장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1.5%)’을 어려움으로 꼽기도 함
  - 현재 근로 중인 장애인이 아닌 이상 특수 차량 구매 또는 차량 개조 시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부담 시 차량 구입 외 700~1,500만 원<sup>2)</sup> 정도 추가 소요됨. 일례로,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 내부에 수납하는 보조기기인 크레인은 시중가 350~750만 원 정도 소요됨
  - 가구 소득 월평균 금액(2020)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약 70%에 달하며, 특수 차량 구매 및 차량 개조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

#### □ 참고사례(미국, 일본)<sup>3)</sup>

- 미국: 처음 차량 구입 시 차량구입비 및 개조비용 전액 지원, 최초 구입 이후 제한이 있으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최대 약 2천만 원까지 지원
- 일본: 차량 개조 및 구입 시 운전 보조장치 구매액에 대해 비과세, 차량 구입 시 가구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나 최대 약 600만 원까지 지원

#### □ 건의방향 (건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 구입과 일반 차량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2) “장애인 복지차량 제조사 ‘이지무브’ 6년 만에 적자 탈피 추포”, 한겨레신문(2016.0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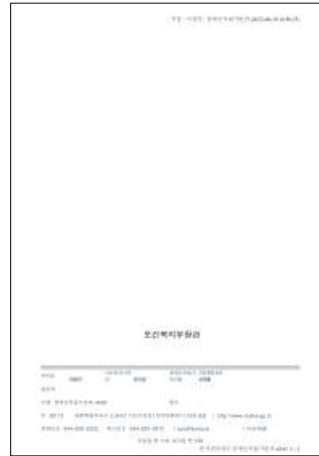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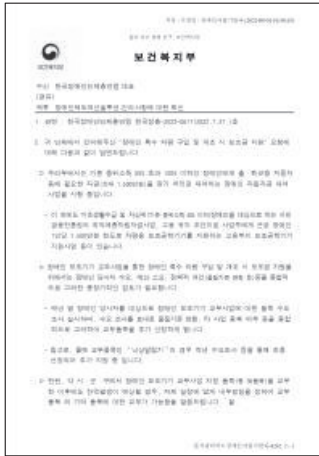
3) 「장애인차량 및 운전지원에 관한 연구(장애인차량·운전지원추진연대, 2015)」

□ **관련경과**

- 7월, 건의처에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8월, 복지부에서는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장애인에게 출·퇴근 용 자동차 등에 필요한 자금(최대 1,500만 원)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자립자금사업, 고용노동부의 보조공학 기기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함. 아울러 매년 말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 대한 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 현황, 타 사업 중복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 추가 선정 중이며, 각 시·군·구에서 교부사업 지정 품목 외 품목은 잔액 발생할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교부 가능하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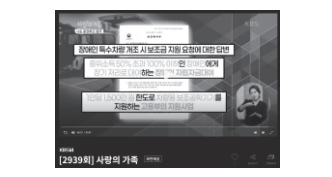
장애인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보조금 지원 요청



보건복지부 혁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더인디고	7. 28.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개조, 근로자 아닌 장애인도 지원해야	
미디어생활	7. 28.	“장애인 특수차량-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확대해야”	
에이블뉴스	7. 28.	장애인 자동차 절실, 특수차량 너무 비싸요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영등포신문	7. 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특수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조	
웰페어뉴스	7. 28.	한정적인 장애인 특수 차량 지원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해”	
전국매일신문	8.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근로자 등 한정적 지원...원활한 사회활동 저해"	
사랑의 가족	10. 1.	나도 운전하고 싶다	



안건 2022-11

##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

### □ 제안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40시간의 교육 및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음
  - 누구나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활동지원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7만 8천여 명(2018)에서 10만여 명(2021)으로 증가해왔음
  - 이용자의 장애유형은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14.2%)로 매우 다양하여, 지원이 필요한 욕구가 단순하지 않고 개별화되어 맞춤서비스가 필요함
  - 개별화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또한 8만 4천여 명(2019)에서 10만여 명(2021)으로 증가해왔음
- 활동지원사의 자격 취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다양한 특징의 활동지원사가 늘어나고 있음
  - 중증장애 기피 등으로 활동지원사 구인난이 심한 가운데, 단순히 교육과 실습 이수 후 활동지원사로 취업이 가능함

-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의 고연령,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가 나타나고 있음
- 자격 취득 조건이 쉬운 만큼 전문성은 부족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가 노화되므로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생소함. 이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함
  - 외국인일 경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하기 힘들기도 함
  - 그렇다고 해서 20~30대가 모두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질의 편차가 존재함.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대로 실행되기 위해 활동지원사 취득시스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이용자 입장의 국가 차원 연구는 진행된 적 있으나,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

〈사례〉

LH와 SH의 청약은 연령대가 높은 활동지원사에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활동지원사의 딸이나 아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경우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기 마련이다. 또한 나처럼 글을 쓴다던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그 외의 서류를 발급해야 할 때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 장애인 당사자 A씨(출처: 에이블뉴스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령 좀 더 젊어질 순 없을까(21.2.2.)”)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활동지원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국 동포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중략) 사건 당시 A 씨는 몸이 불편한 B 씨가 움직이는 걸 도와주다가 B 씨가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KBS 뉴스(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구속(20.05.11))-

□ **건의방향 (건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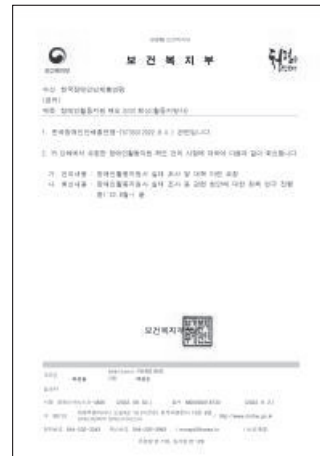
-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
  -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취득시스템, 품질관리 등) 마련 요청

□ **관련경과**

- 8월, 건의처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건의서를 전달 하였음
- 9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운영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 업체와 계약 진행 중이며, 이용자, 활동지원사 양 쪽으로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예정이라고 답변함. 솔루션의 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업체에 전달 예정이라고 답변함
- 10월,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존재해, 이 과정에서 의견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회신함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요청



보건복지부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더인디고	8.5.	활동지원사 전문성 높이고,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막는 대책 내놔야!	
웰페어뉴스	8.5.	전문성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관리 방안 마련돼야”	
팝콘뉴스	8.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질 '들쭉날쭉...' "대책 마련하라"	
에이블뉴스	8.5.	"장애인활동지원 전문성 부족, 실태도 몰라"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미디어생활	8.8.	“활동지원사, 실태조사와 자격취득시스템 개선해야”	
팝콘뉴스	8.12.	[단독]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돌입	

안건 2022-12

## 서울 바우처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 □ 제안배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교통수단을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함
  - 위 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서울시 설공단 위탁),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복지콜과 바우처 택시(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바우처택시는 어플이나 전화로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함. 전화로 어플 신청 건을 취소 가능하나 반대로는 불가하여 이용이 불편함

### □ 현황 및 문제점

- 시각장애인은 버스나 지하철보다 콜택시가 이용하기 편리하여 자주 사용함
  - 버스 정차 위치 및 버스 번호 확인의 어려움이나 지하철의 넓은 역사 내 목적 출입구까지 가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은 버스나 지하철보다 콜택시가 편리함
  -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외출 시 11,748명의 시각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함
  - 복지콜은 차량 수도 158대로 적을뿐더러, 대기 시간도 최소 30분 이상으로 긴 반면,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를 이용해 차량 수도 많고 대기 시간도 일반 택시와 비슷해 많이 이용되고 있음
  - 2020년 서울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는 약 40만 건에 육박하여, 도입 첫 해인 2017년 약 9만 건 대비 4.4배 증가함
- 바우처택시 콜센터와의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아 어플이 생겼지만, 접수 신청 및

취소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바우처택시의 콜센터는 각 회사의 일반 콜센터와 분리되어 있으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음
- 출퇴근 시간에는 콜이 몰리는 등 시간대에 따라 콜센터와의 전화 연결이 쉽지 않음
- 이를 토대로 어플로도 콜을 신청하고 취소 가능할 수 있게 접근성이 고려되어 시스템 개편됨
- 현재 바우처택시는 각각 신청한 방법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전화는 어플 신청 건도 취소 가능함. 반대로 전화 신청 건은 어플로 취소 불가함
- 출퇴근 시간과 같이 신청이 많은 시간대는 전화 연결도 쉽지 않을뿐더러, 몇 번의 클릭을 거쳐야 하는 어플보다 전화가 신청 및 취소가 훨씬 편리함
- 어플과 전화의 신청 및 취소시스템이 연동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 건의방향 (건의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각장애인 콜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 어플과 전화의 신청 및 취소시스템이 연동되도록 개선 요청

#### □ 관련경과

- 8월, 건의처에 '시각장애인 콜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8월, 최근 바우처택시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 연결이 이전보다 원활하지 못하고, 어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달함. 전용 어플 개선을 위해 추가 예산이 소요돼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답변함.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바우처택시 전용 어플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해나가겠다고 회신
- 10월, 장애인 바우처택시 관련 2023년도 예산은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편성했으며, 어플 개선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 현재 택시정책과로 업무 이관됐으며 어플 기능개선 부분은 본과 장애인콜택시 팀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 12월,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현재 연계 업체(2곳) 중 1곳만 어플이 있으며, 이는 업체 자체의 문제로 서울시가 관할할 수 없다고 답변함.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콜택시 어플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함







서울 바우처택시 취소 기능 개선 요청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더인디고	8.4.	편리한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안 받고, 앱 취소도 쉽지 않아	
미디어생활	8.4.	서울바우처택시, 전화신청건은 어플로 취소 불가능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뉴스캔	8.4.	취소 전화 안받는 서울 바우처택시, 어플 신청 취소도 안돼...개선 서둘러야	 <p>NEWS SCAN 취소 전화 안받는 서울 바우처택시, 어플 신청 취소도 안돼 시각장애인이 이동권 향상을 위한 서울 바우처택시 신청 취소도 안되는 등 불편한 점이 지적되면서 서울시에 서울 바우처택시 신청 관련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신청 취소도 안되는 등 불편한 점이 지적되면서 서울시에 서울 바우처택시 신청 관련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신청 취소도 안되는 등 불편한 점이 지적되면서 서울시에 서울 바우처택시 신청 관련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p>
웹페어뉴스	8.4.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신청하면 모바일로 취소 '불가'... 개선 요청	 <p>웹페어뉴스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신청하면 모바일로 취소 '불가'... 개선 요청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전화 신청 시 모바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신청 취소도 안되는 등 불편한 점이 지적되면서 서울시에 서울 바우처택시 신청 관련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p>
에이블뉴스	8.8.	시각장애인 이동권 '바우처택시' 불편 아우성	 <p>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이동권 '바우처택시' 불편 아우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전화 신청 시 모바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신청 취소도 안되는 등 불편한 점이 지적되면서 서울시에 서울 바우처택시 신청 관련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p>
시사 복지신문	8.16.	시각장애인 이동권 '바우처택시' 불편한 점	 <p>시사 복지신문 시각장애인 이동권 '바우처택시' 불편한 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전화 신청 시 모바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신청 취소도 안되는 등 불편한 점이 지적되면서 서울시에 서울 바우처택시 신청 관련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p>

안건 2022-13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 □ 제안배경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장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질환 종류에 따라 진료비나 약제비,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및 재산(지역 및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됨
  -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던 신장장애인이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투석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큼
  -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경우가 신장장애는 99.1%로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음
  - 신장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월 평균 약 21만 원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
-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부터 탈락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신장장애인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8,793명 정도에 달함
  -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초과하여 탈락된 인원은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기존수급자 중 155명이 탈락해 다른 년도 대비

2배 이상 탈락됨

- 2022년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약 3~5억 원인 반면, 2022년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으로 폭등하여 가치가 상승함

〈사례〉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5년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월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벌며 생활하고 있음. 2022년 4월, 딸의 배우자 재산소득이 높아져 2022년 6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 **건의방향 (건의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변동이 심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유동적으로 상향 및 폐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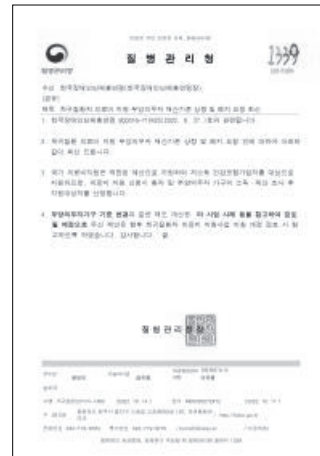
□ **관련경과**

- 9월, 건의처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10월,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변경과 같은 제도 개선은 타 사업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될 예정으로, 건의한 부분은 향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검토 시 참고하겠다고 답변함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외무자  
재산기준 상향 및 폐지 요청



질병관리청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9. 28.	집값에 휘둘리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웰페어뉴스	9. 28.	집값에 휘둘리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개선 요청'	

안건 2022-14

##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 □ 제안배경

- 인공와우 수술한 청각장애인은 원활한 청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터리 교체를 해주어야 하며, 혹시 모를 변수 상황에 대비해 여분을 항상 챙겨 다녀야 함
- 항공기 기내 반입 물품 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는 리튬 전지의 전력소비율이 100Wh 미만인 경우 반입 가능하도록 함
  - 관련 법령에서는 개수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항공사마다 규정상 리튬배터리 100Wh 이하 4~5개까지 반입하도록 되어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청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인이 3.4%(2014)에서 3.7%(2017), 4.2%(202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원활한 청취 환경을 위해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와우 배터리가 중요함
  -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배터리 종류가 리튬이나 아연 등 다양하며,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리튬 배터리는 가볍고 에너지밀도가 높아 성능이 오래 가나, 폭발 위험이 있으며, 아연 배터리는 폭발 위험도 없고 저렴하나 성능이 오래가지 않음
  - 대표적으로 인공와우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인 코클리어, 메텔은 아연을 사용하며, 어드밴스드바이오닉스(AB)는 리튬을 사용함
- 인공와우 리튬 배터리의 전력소비율이 법적 제한 기준보다 작음에도 기내 반입 시 개수가 제한되며, 그 기준 또한 항공사별로 상이해 당사자의 혼란을 야기함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는 리튬의 전력소비율이 100Wh 미만인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리튬 배터리 제조사의 전력소비율은 1Wh도 되지 않는 겨우 0.792Wh(220mAh)로 작음
- 대한항공은 일반용/의료용 구분 없이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나, 실질적으로 6개 이상부터는 반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함. 그 외 국내선 기준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 플라이강원, 진에어 등 모든 항공사가 4~5개까지 반입 가능하다고 함
- 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21 기준)도 전력소비율이 14.8Wh, 태블릿PC(갤럭시탭 S8 기준)는 29.8Wh으로 인공와우 배터리보다 훨씬 전력소비율이 크에도 불구하고 기내 반입 시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사례〉

인공와우를 20년 째 사용 중입니다. 인공와우 배터리는 소모품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용시간이 감소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 여유 있게 배터리를 챙기는 편입니다. 비행기를 타야할 일이 있어 넉넉하게 배터리를 챙겨 갔더니, 일반용/의료용 구분 없이 5개까지만 반입이 되고 나머지는 반입 불가라 폐기하거나 물품보관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항공사마다 반입 가능 규정도 달랐습니다. 일반용과 의료용 구분도 못하는 상황인데다, 청각장애인이 쓰는 보청기 배터리인데 반입 가능 개수가 상이하다는 게 당사자의 혼란만 야기할 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청각장애인 A씨

□ 해외사례

- 미국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100Wh 이하의 리튬 배터리는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기내수하물로 반입 가능하다고 규정함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100Wh 이하의 리튬 배터리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 없이 최대 20개까지 기내수하물 반입 가능하다고 규정함

Use the below table to determine if your PED, PMED or spare battery(ies) can be carried.

Wh rating or lithium metal content	Configuration	Carry-on baggage	Checked baggage	Operator approval
≤ 100 Wh / 2g	In equipment (PED or PMED)	Yes (max 15 PED/PMED <sup>1</sup> )	Yes	No <sup>1</sup>
	Spare battery(ies)	Yes (max 20 spare batteries <sup>2</sup> )	No	No <sup>2</sup>

출처: IATA 리튬배터리 승객 팜플렛(Passengers traveling with lithium batt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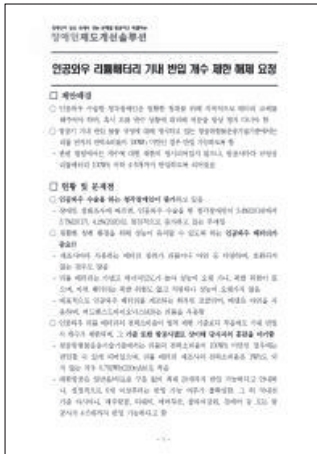
□ **건의방향 (건의처: 국내 각 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 모든 국내 항공사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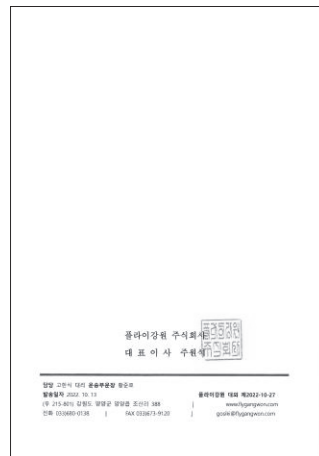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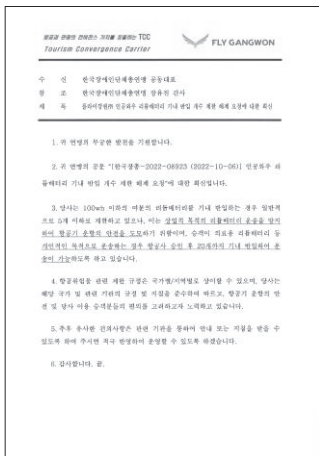
□ **관련경과**

- 10월, 각 건의처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10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는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등)를 요청함.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함. 12월에 항공사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 10월, 8개 항공사 중 5개 항공사(아시아나, 제주, 플라이강원, 진에어, 에어부산)에서 회신. 플라이강원과 제주항공은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에 따라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하고, 그 외 항공사(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는 관계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 12월, 국내 각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 모두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수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함. 다만 안전성에 대한 확보, 인공와우 이용자 이해 및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한국장충은 안정성 및 인공와우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알리고 국토부가 지침을 권고하여 항공사들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



플라이 강원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미디어생활	10. 7.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더인디고	10. 7.	국내 항공사, 인공와우 배터리 반입 '빡빡'... 청각장애인 '불편' 호소	
에이블뉴스	10. 7.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	
웰페어뉴스	10. 7.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 '개선 요구'	
환경신문	11. 6.	항공사는 청각 장애인의 '인공와우 배터리' 반입 풀라!	

안건 2022-15

##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

### □ 제안배경

-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령이나 장애 등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급되며,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됨
  - 동법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의거,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달라짐
  - 동법 제63조에 의거해 조기노령수급이 가능하나 일찍 수령할수록 6%씩 삭감됨
  - 한편, 높은 노동 강도로 기대수명이 짧은 광업 및 어업종사자 등 특수직종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수령가능하며 삭감되지 않음
- 장애인의 평균수명도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삭감되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음
  - 한국 전체 인구 기대수명(2020)은 83.5세이나,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2019)은 76.1세, 중증장애인은 73.1세로 8~10년 정도 차이가 남
  -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조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장애인이 조기에 사망하는 비율이 적게는 1.2배 많게는 16.3배로 훨씬 높음
- 상당 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긴 경우도 꽤 있음
  -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음
  - 2018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료 기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중증장애인(당시

1,2급)의 수는 7,856명 정도였으며, 현재는 시간이 지나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측됨

< 전체인구 및 장애인의 조사망률 비교 >

(단위 : %, 인구 1천 명당)

구분	전체인구 조사망률* (2017년, A)	장애인 조사망률** (2017년, B)	비율 B/A
합계	5.6	27.5	4.9
0~9세	0.3	4.1	12.6
10~19세	0.2	2.5	16.3
20~29세	0.4	3.6	9.8
30~39세	0.7	3.6	5.4
40~49세	1.5	6.3	4.3
50~59세	3.3	10.8	3.3
60~69세	6.9	18.2	2.6
70~79세	21.4	39.3	1.8
80세 이상	83.4	98.1	1.2

\*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결과(통계청, 2018)

\*\* 2016~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통계청),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국립재활원, 2019)

- 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생계유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삭감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으로 ‘연금, 퇴직금(15.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17.4%)’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적지 않음
  -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115.5만 원)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47.5만 원)이 큼. 생계유지에 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삭감된다면 공적이전소득에 의지하던 가구는 최대 30% 삭감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참고사례4)

○ 프랑스

- (제도) 최소 가입요건(1분기 이상 가입) 충족 후 65세가 되면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1951년 7월 이후 출생자는 2023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될 예정
- (장애인) 83~126분기(20.8~31.5년) 이상 가입 후 장애로 인해 퇴직한 경우 55세부터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

○ 독일

- (제도) 최소 가입요건(5년 이상 가입) 충족 후 65세가 되면 완전노령연금(기본연금액의 100%) 수급이 가능하며, 2012년부터 2029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 (장애인) 35년 이상 가입 후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을 경우 63세부터 중증장애인 노령연금이 감액 없이 지급됨.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50% 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중증장애인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12년부터 2029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63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 건의방향 (건의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
  - 중증장애인이 조기노령연금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 요청(국민연금법 제63조2 법령 개정 촉구)

□ 관련경과

- 10월, 각 건의처에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11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장애인인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수급연령과 관계없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20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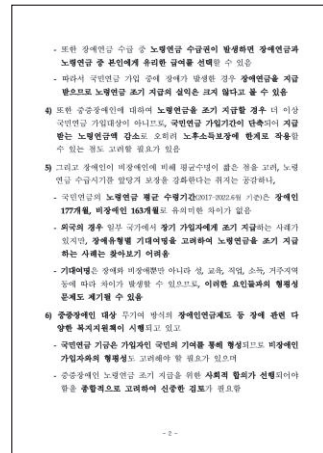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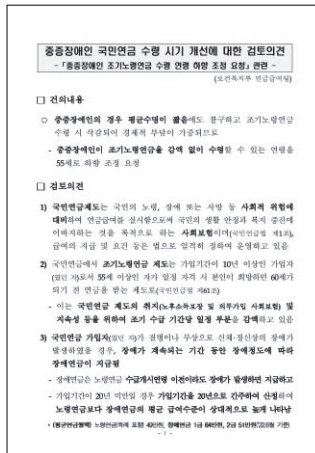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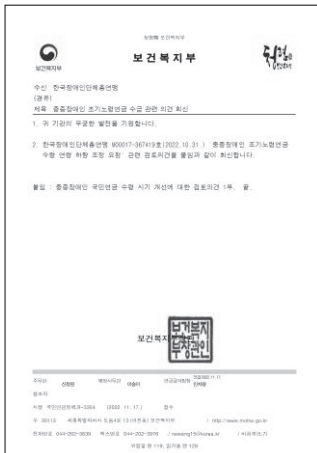
---

4) 정인영, 우해봉(2015),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만일 경우 가입기간을 20년으로 간주 산정하여 노령연금보다 장애연금의 평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변함. 또한,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축돼 지급받는 노령연금액 감소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함. 노령연금 평균 수령기간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2017~2022.6월 기준 장애인 177개월, 비장애인 163개월), 외국에서도 장애유형별 기대여명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 함. 전반적으로 비장애인가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요청






보건복지부 회신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 개선에 대한 검토의견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11. 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령 삭감 피는물	
더인디고	11. 2.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감액은 “불공평”...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웰페어뉴스	11. 2.	“중증 장애인, 감액 없는 조기노령연금 지급 필요”	
서울신문	11. 2.	중증장애인 평균수명 짧지만...연금 일찍 지급시 최대 30% 삭감	
시사1	11. 2.	한국장총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으면 삭감돼 '생계 위태'... 삭감 말아야"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더나은미래	11. 3.	“연금 조기수령 30% 삭감 규정… 평균수명 짧은 중증장애인은 ‘예외’로 해야”	
미디어생활	11. 2.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복지TV	11. 9.	중증 장애인, 감액 없는 조기노령연금 지급 필요	

안건 2022-16

##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 □ 제안배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거하여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있음
  - 지하철(도시철도) 역사에도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개찰구,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 교통약자용 개찰구,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되어있지만, 특정 상황에는 이용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불편을 주고 있음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라 교통약자용 개찰구(폭 900mm 이상)는 각 개찰구에 최소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개찰구마다 최소 1~2대씩은 설치되어있음. 점자블록도 지하철 각 외부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동선을 유지하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인구가 많은 방향에서 계속 사용되다보니 반대 방향에서 사용이 어려울뿐더러, 개찰구 이용 방향이 유동적이어서 점자블록에 맞닿아있는 일부 개찰구는 때에 따라 사용 불가함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출이 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함
  -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혼자 외출하는 장애인은 78.6%(지체장애 87.4%, 시각장애 82.2%)로 나타남
  - 동일 조사에서 장애인의 7.8%가, 교통약자 이용실태(2021)에서는 13.1%가 지하철 및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어렵고 불편하게 느낌



-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느낀 경우가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불편함을 느껴서 (52.6%)’를 가장 많이 꼽음
-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지하철에도 교통약자 개찰구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 불가해 이용에 불편이 야기됨
  - 교통약자 개찰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이용이 몰리다 보니 반대 방향에서 진입이 어려움. 점자블록이 맞닿아있는 시각장애이용 개찰구는 진행방향이 차단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문제의 원인은 법이 편의성을 다 포괄하지 못한 것과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음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개찰구는 자동개폐식일 것과 유효폭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었으며, 점자블록은 여객시설 주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며, 크기나 높이, 재질 등만 언급되어있음
  - 교통약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가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인식의 문제도 있음
  - 개찰구의 선택지가 다양한 비장애인과 달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만 사용가능한데, 이마저 상황에 의존돼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음

〈사례〉

지하철 개찰구가 평소에는 양방향 사용가능하지만 바쁜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넓은 개찰구는 하나밖에 없다보니 모두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중요한 회의나, 기차, 비행기 등 정해진 시간 약속이 있을 땐 엄청 마음을 졸입니다. 단 몇 초 차이라도 엄청 긴박합니다. 장애인에게 1분의 기다림은 10분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

		
<p>〈노량진역 개찰구, 2022〉</p>	<p>〈을지로3가 개찰구(출처: 유튜브 원샷한술, 2022)〉</p>	<p>〈고속터미널역 개찰구(출처: 더팩트 뉴스, 2015)〉</p>

□ **건의방향 (건의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의 ‘개찰구’기준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 추가 요청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 추가 요청(국토교통부 광역시설정책과)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요청(서울교통공사)

□ **관련경과**

- 11월, 각 건의처에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11월,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가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 형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함. 현재 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집표기는 각 역사 환경을 고려해 승차 또는 하차 모드로 전환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여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함
-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에서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 추가와 관련해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 시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회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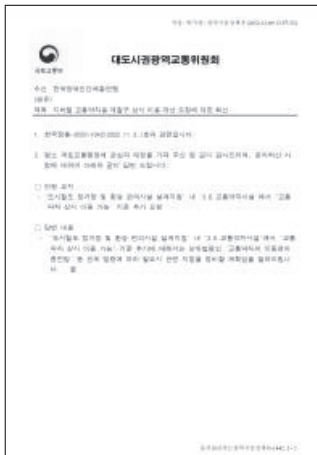


지하철 교통약자용 개찰구 상시 이용 개선 요청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서울교통공사 회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신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11. 7.	장애인들 지하철 개찰구 통과 불편 '절절'	<p>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Ablenews. The main headline is "장애인들 지하철 개찰구 통과 불편 '절절'" (Disability people's subway station passage is inconvenient 'pitiful'). The article discusses the difficulties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using subway turnstiles. It mentions that while there are some improvements, the current situation is still very inconvenient and needs further attention.</p>
글로벌뉴스통신	11. 7.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상황따라 사용 가능	<p>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Global News Communication. The main headline is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상황따라 사용 가능" (Insufficient disabled people's turnstiles, useable according to situation). The article reports on the current state of subway turnsti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oting that while some are usable, many are not, and the situation varies by station and time of day.</p>
더인디고	11. 7.	교통약자 개찰구, 출퇴근 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도 무용지물!	<p>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The Indigo. The main headline is "교통약자 개찰구, 출퇴근 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도 무용지물!" (Disability people's turnstiles, Braille blocks for visually impaired are useless during rush hour!). The article highlights that during busy times like rush hour, the Braille blocks on the turnstiles, which are supposed to help visually impaired people, are often ineffective due to the crowd and noise.</p>

안건 2022-17

##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 □ 제안배경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도 접근성 보장 대상임
-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함(2023년 1월 시행)
  - 11월 18일 입법 예고된 하위 시행령에 따르면,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그 안에 포함된 응용소프트웨어 역시 함께 제공되어야 함
- 공항 내 대표적인 키오스크인 셀프체크인 기기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가 극히 적으며, 있어도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지 않아 특정 항공사에 대해서만 셀프체크인 가능한 상황임
  -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해 장애인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사회참여로 외출이 활발해지며 비행기로 지역 간 이동도 늘어남
  -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사회활동과 관련해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약 8명(78.6%)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 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는 0.5%(2019), 0.9%(2020)에서 1.4%(2021)로 3배 증가함

- 비행기 및 공항의 이용은 늘어나지만, 공항에서 많이 이용하는 셀프체크인 기기(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되지 않음
  - 장애인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에는 길이나 높이 등 물리적 기준부터 다시 듣기, 대체 콘텐츠 제공 등 보충적 기준까지 포함되어있음
  - 이 지침에 따라 2018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1곳(청주공항) 접근성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부분 미흡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공항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한국공항공사 청주 공항	작동부 및 디스플레이 위치 적정성	미흡
	컨트롤 편의성	미흡
	대체 콘텐츠 및 피드백 제공	미흡
	이어폰 단자	없음
	터치스크린 편의성	미흡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미흡
	키패드 배열	미흡
	사용 도움 안내 문구	없음

출처: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김대명, 2018, 이슈와 논점)

- 이번 국감 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항이 포함된 ‘공항/철도/터미널’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점수는 63.2점으로, 전체 평균 66.7점을 밑돌
-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항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음
  -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공항에 총 25개의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설치되어있음. 그 중 김포공항에 설치된 2개만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함
  - 공항에서는 하드웨어인 셀프체크인 기기를 제공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는 항공사에서 제공해야함(제주항공만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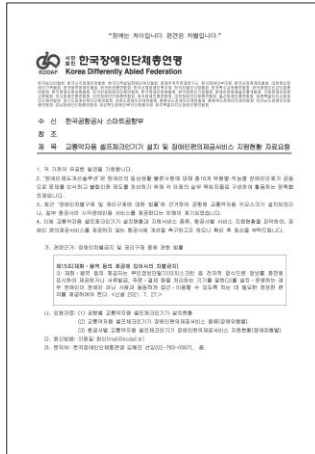
□ 건의방향 (건의처: 제주항공 제외 국내 각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요청(국내 각 항공사)
  -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확대 운영 요청(한국공항공사)

□ 관련경과

- 11월, 각 건의처에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11월,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모든 유형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제주항공과 함께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운영 중이나, 내년 초에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김해, 제주, 대구, 청주, 광주, 여수)에 확대 적용 예정이라고 답변함. 항공사 연계 역시 지속적으로 항공사 측에 요청 중이며, 현재 대한항공과 연계 테스트 중임
- 11월,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본사에서 운영 중인 Amadeus사 기능 적용 키오스크는 2024년 종료가 되며, 새로운 버전의 키오스크 서비스 도입 계획 중이라고 밝힘. Amadeus사의 새로운 키오스크 버전은 현재 개발 중이며 2024년부터 서비스 적용 위해 2023년 말까지 개발 완료 예상한다고 함. 이와 함께 교통약자 사용 기능 개발을 추진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버전의 키오스크에 교통약자 기능 사용 가능 시점은 2024년으로 예상된다고 회신함
- 12월, 대한항공은 건의 전부터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공항에 설치되어있는 셀프체크인 기계로 구현될 수 있는지 개발환경에 대해 실태 점검 중이라 답변함. 건의 사항에 대한 완료 시점을 안내하기는 어려우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신함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공항 내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접근성 확보 요청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11. 25.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장애인 불편	
더인디고	11. 25.	국내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5%만 이용 가능!	

안건 2022-18

## 대형마트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요청

### □ 제안배경

- 올해 7월 28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3,000㎡ 이상(약 907평)의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됨
-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어려움
  -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전동휠체어나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는 이용불가함
  - 계산대 간격이 좁거나 셀프계산대의 경우 카드리더기 등의 높이가 높아서 이용이 어려움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혼자서 외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쇼핑도 자주 함
  -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사회활동과 관련해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장애인 10명 중 약 8명(78.6%)이, 지체장애인은 10명 중 약 9명(87.4%)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장애인 중 10.3%가, 특히 지체장애인은 11.3%(약 11만 명)가 ‘쇼핑(물건사기)’을 위해 외출한다고 답함
- 최근 장애인 등 편의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의무화됐으나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9월 기준, 쇼핑카트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대형마트는 총 426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수동휠체어만 사용 가능하며, 바퀴 큰 수동휠체어나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는 사용불가함. 상품 적재량이 많아지면 수동휠체어는 움직이기 어려움
  - 실제로 서울 강남구 및 성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를 한 결과, 전동휠체어가 한쪽만 부착가능해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회전이 불가하며, 쇼핑카트를 장착하는 것도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장착이 가능했음

- 쇼핑카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에는 비치해야하는 수량과 안내 의무만 나와 있을 뿐,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구체적 규격은 설정되어있지 않음



출처: 해냄복지회(전동휠체어는 한쪽만 장착 가능해 쇼핑카트를 한손으로 고정하고 움직여야 함)

- 한편, 쇼핑카트를 사용하더라도 상품 구매 최종 단계인 계산이 어려움
  - 계산대 간 간격이 너무 좁거나 셀프계산대를 이용해도 키오스크 및 카드리더기가 너무 높아 계산이 힘들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내 대상시설에 설치해야할 편의시설 종류에는 ‘계산대’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계산대와 유사한 ‘접수대’나 ‘대표소’는 전면 공간 확보에 대한 얘기는 있으나, 통로나 폭에 대한 기준은 없음

#### □ 건의방향 (건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대형마트 장애인 접근성 보장 요청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비고란에 모든 휠체어가 이

용가능하도록 장애인용 쇼핑카트 규격에 대한 내용 기재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내 '계산대'에 대한 기준 마련

□ **관련경과**

- 11월, 건의처에 '대형마트 장애인 접근성 보장 요청'건의서를 전달하였음

□ **언론보도**

매체명	보도일시	보도제목	보도자료
에이블뉴스	12. 2.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있으나 마나'	
신아일보	12. 2.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더인디고	12. 2.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당사자에게겐 유명무실	

안건 2022-19

##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 제공

### □ 건의배경

- 최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교육자료를 받았는데, 보안이 걸린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받아 읽을 수가 없었음

### □ 건의내용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가입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자료를 pdf 형식의 파일로 보낼 때, 보호를 걸어 보내면 시각장애인 가입자는 이를 텍스트 등으로 변환하여 읽을 수 없으므로 pdf 형식의 파일을 통해 자료를 첨부할 경우 파일에 보호를 걸지 않고 보내주면 좋을 듯.

참고로 매월 발송하는 신용카드 고지서의 경우 html 형식의 파일로 보내면서 암호를 걸어 두는 경우는 암호를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서 교육자료를 가입자 본인만 보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신용카드 고지서와 같은 형식으로 교육자료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건의방향(건의처: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 제공
  -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제공 시 HTML 파일 제공

### □ 관련경과

- 3월, 건의처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제공' 건의서 내용을 전달하였음
- 6월,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은 각 협회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건의사항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했다고 회신함



안건 2022-20

##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가입의 문제

### □ 건의배경

-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 장기기증 공여자는 장기기증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
- 생체 장기기증 장기는 간, 신장, 골수등이 있음.
- 간, 신장 장기기증을 하고 난 후 장기기증 공여자들이 보험가입을 할 경우 유병자 가입을 해야 하거나 장기기증한 질환의 보장을 받지 못함.
- 또한 보험 가입 절차가 까다롭게 보험심사가 되며, 부담보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공여자들이 장기기증 후 1년에서 3년이 지나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 심사기준이 다름

### □ 건의내용

- 간, 신장 장기기증 공여자들은 보험가입시 유병자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하기 전 보험료로 책정을 하여야 함.  
(단, 차액보험료는 국가 지원 혹은 각 보험사의 사회공헌으로 지원 필요)
- 보험사마다 보험가입 심사기준이 다르며, 장기기증 이후 6개월 합병증, 추가치료 이력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 □ 건의방향(건의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료 책정 및 보험가입 제도개선 요청
  - 장기기증 공여자 보험료 책정 시 기증 전으로 책정
  - 장기기증 이후 6개월 간 치료 및 합병증 이력 없을 시 보험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 부 록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참가 단체(단체명 가나다, 장애인단체순)

단체명	주소	연락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02) 2675-5364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1103호	02) 461-226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 중앙보호회관 504호	02) 3437-208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6층	02) 799-1000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울시 동일로 136길 10 청원다미소아파트 301호	02) 2236-908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4층	02) 3675-9935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02) 445-544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02) 796-4280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4층	02) 754-77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4층	02) 783-0067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307호	02) 859-828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4길 22, 202호	02) 3481-1291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6층	02) 2678-3131
한국장애인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4층	02) 457-0427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6층	02) 786-8483
더인디고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919호	



## 2022 장애인제도개선 Solution 활동 보고서

발행일 : 2022년 12월 26일 발행

발행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팩스 : 02-783-0069

이메일 : mail@kodaf.kr

편집·인쇄 : 블루에드 02) 6082-7076

ISBN 978-89-5983-331-3-93330